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0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0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3월 25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장창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 [ 안내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http://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Vol.80

2

##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부산광역시,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게재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하는 조례 개정

8

##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안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51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서울특별시,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친환경 수변도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 발표

광주광역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2022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확정

경상남도 '2022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경상남도, 전체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완료

15

##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국토부, 일반국도 유희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공모 추진

국토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부, 철도역사 유희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국토부, 국토부-광역시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국조실,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행안부, 2022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인구감소지역 최초 선정  
해수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특별시, 유희주차장 나눔으로 1만7천면 개방  
부산광역시, 가치 있는 나무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제도 운영  
부산광역시,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대구광역시, 특·광역시 최초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대봉동 명품 웨딩골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 시민중심 도시공원 환경개선 본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정신 담은 금강보행교 잠재관광지로 우뚝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전라북도, ‘한옥과의 만남’ 주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 30억 들여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시군 공모로 추진  
경상남도, 2022년 청년친화도시·청년터 공모,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35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운영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2.03.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제도의 개선은 일반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를 고려하였다.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강화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등 분양시장 질서 확립,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등 분양사업자의 부담완화 등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li> <li>-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li> <li>-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li> <li>-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li> <li>-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li> <li>-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분양신고일→분양광고(공고)일)</li> <li>-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li> </ul>
분양시장 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li> <li>- 허위·과장 광고 근절</li> </ul>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li> <li>-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li> </ul>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공급과. 2022.02.07.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li><li>-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li><li>-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li></ul>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 마련</li></ul>

##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정책과. 2022.02.21.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li><li>*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 (건축법 제57조)</li></ul> <p style="text-align: center;">〈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p> <table><tr><th>용도지역</th><th>주 거</th><th>상 업</th><th>공 업</th><th>녹 지</th><th>기 타</th></tr><tr><td>기준면적</td><td>60㎡</td><td>150㎡</td><td>150㎡</td><td>200㎡</td><td>60㎡</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li><li>*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li></ul>	용도지역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기 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용도지역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기 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li><li>-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li></ul>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지역균형발전과. 2022.02.08.

국토  
정책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2월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한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이에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게재

공항도시팀. 2022.02.08.

### 건축 정책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 결정 구역(가덕도 전역)]

##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하는 조례 개정

토지정보과, 2022.02.28.



대구광역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월 2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안]

구분		기존	개선
매매	6억~9억원	0.5%	0.4% (0.1%p 인하)
	9억~12억원	0.9%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3억~6억원	0.4%	0.3% (0.1%p 인하)
	6억~12억원	0.8%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 행안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51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규제혁신과. 2022.02.10.

건축  
정책

국토  
정책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정안전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과제들이 대상으로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 [행정안전부 주요 규제 개선과제]

구분	세부내용
①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공장시설 업종제한 완화</li> <li>· 철도 유희부지 공익목적 사용시 요금 감면</li> </ul> </li> <li>◇ 지역 개발 통한 경제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li> <li>·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li> </ul> </li> </ul>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매출 증대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li> <li>·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무실 등 시설의 공동사용 허용</li> </ul> </li> <li>◇ 소상공인 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 확대 및 신고제 도입 등 개선</li> <li>· 소상공인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기간 연장</li> </ul> </li> </ul>
③ 주민편의 향상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불편 행정절차 개선·행정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관련 무인날인방식 개선</li> <li>· 국가장학금 선정기한 단축</li> <li>· 지적 전산자료의 온라인 교부 허용</li> </ul> </li> </ul>
④ 사회적 약자 보호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복지조치 강화·동물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li> <li>·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li> <li>· 가해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 보호 강화</li> <li>·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변경 신청 온라인 접수 허용</li> </ul> </li> </ul>

## 서울특별시,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수정가결

공동주택지원과. 2022.02.16.



서울특별시는 2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소위원회임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8,077㎡)는 1978년도에 건립되어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에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동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실5단지 위치도 및 배치도(안)]

## 부산광역시, 친환경 수변도시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 발표

도시균형개발과. 2022.02.0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2월 8일 제7차 서부산전략회의를 열어 친환경 수변도시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을 논의하고, 서부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개발해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로 한발 앞서갈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제2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될 공간은 김해공항 서측, 강서구 강동동 및 대저2동 일원 약 320만 평 부지로, 당초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따라 추가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수차례의 개발계획에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지역이다.

제2에코델타시티는 현재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약 6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7년까지 단계별로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예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하고, 2028년 토지 분양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의 목표는 15분 생활권과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15분 내 주요생활권 접근 가능 도시 구현 ▲제로에너지 녹색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적용과 항공 MRO산업 육성 등으로 혁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청년주택, 청년혁신센터 조성 등 청년의 삶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네 가지다.

부산광역시는 제2에코델타시티가 완성되면 새로이 건설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만의 배후지로서 강서구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정비과. 2022.02.15.



광주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5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정비 방향과 기준을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정비사업 예정구역 118개소 중 준공된 지역 및 현재 미추진 구역을 해제해 정비예정구역을 50개소로 조정하였다.

또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전면 철거위주의 정비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주거생활권을 30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로 29개 주거환경지표를 설정·분석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 보존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전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 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 분석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광주광역시, 2022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확정

고령사회정책과, 2022.02.27.

###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가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 실현을 위한 2022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1기(2020~2022년)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르신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물리적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확정된 올해 시행계획에는 ‘노후 걱정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문화 ▲돌봄복지 ▲보건·요양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에 49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총 6,9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노인일자리 및 전담기관 인프라 확대 지원 ▲장년층 종합지원 플랫폼 빛고을50+센터 운영 ▲치매예방 특화형 노인복합시설 건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 확대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교통약자를 배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서 고령친화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시행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정책과제 발굴 등 정책대상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제1기(2020~2022년) 3개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고령친화도 진단 등을 실시해 미흡한 정책들을 수정·보완하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기(2023~2027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령친화도시 재가입(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상남도, ‘2022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건축주택과. 2022.02.08.



경상남도는 2월 8일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2022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계획’은 공동주택의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소방시설과 공동체활성화 분야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를 완료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 제고, 디지털 공동주택 기반조성, 서민거주 공동주택 주거불편 해소 등 4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각 단위사업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은 경상남도 대표누리집 건축정책마당(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축정보>건축정책마당)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전체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완료

도시계획과, 2022.02.1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지난해 산청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전 시·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쇠퇴한 구도심 총 134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정부공모에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51개소가 도내에 진행 중이며 올해 1,45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활성화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79개소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500여 개소의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정보 공유와 도민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올해 5월에 개시하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와 중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 인증제도인 도시재생사 60명 양성은 물론, 청년인턴십 60명을 운영하면서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인구소멸을 막고 낙후된 구도심을 활기차게 바꾸어 나가는 등 청년특별도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남해시 남해읍 '청년문화공방')]

#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녹색건축과, 2022.02.07.

건축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 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휘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참여기관]

권역	포함 지역	대표기관	참여기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성균관대학교	한국에너지진단사협회 등 10개 기관
		중앙대학교	에너지평가사협회 등 10개 기관
강원권	강원	강원대학교	강원건축물에너지평가원 등 7개 기관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공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
전라권	광주·전북·전남·제주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조선대, 전남대 등 17개 기관
		전주대학교	군산대, 전주에너지센터 등 14개 기관
경상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경북대학교	금오공대, 영남대 등 9개 기관
		동아대학교	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5개 기관

## 국토부,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공모 추진

도로관리과. 2022.02.10.

국토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성토부,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일원)]

## 국토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지적재조사기획단. 2022.02.17.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다.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협업 실적]

사업연도	총계	사업완료	추진중	미착수
총계	137	24	84	29
2021	50	-	26	24
2020	31	1	25	5
2019	48	16	32	-
2018	8	7	1	-

## 국토부, 철도역사 유희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철도운영과. 2022.02.21.

건축  
정책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월 21일 철도역사 유희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희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 어린이집 운영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7개역(오송역, 월곶역, 거제역, 정읍역, 이천역, 재송역, 거제해맞이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보육정원 30명(4세 이하), 시설면적 300㎡ 내외의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어린이집을 전국에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역사 유희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은 이용 가정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는 철도-주택 복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부지를 활용한 레일스테이(청년 임대주택) 건설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철도자산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철도어린이집(19년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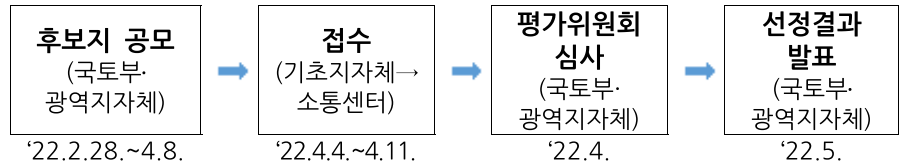
## 국토부,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2.2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절차]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③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준치지역 신청 가능)
-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월)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월 28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조실,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022.02.2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정부는 2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하여 왔다.

이번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환받은 캠프 스탠리 취수장(1천㎡)도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 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행안부, 2022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인구감소지역 최초 선정

지역사회혁신정책과. 2022.02.13.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행정안전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행안부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이 함께 일상 속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앞으로는 경북 청도군, 경남 밀양시를 추가하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 청도군과 경남 밀양시 소통협력공간은 광역·기초 지방비를 포함하여 3년간 총 180억 원(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행안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에, 지자체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상반기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1호 건물로 감염병 위기 극복의 상징장소이자 오랫동안 지역보건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온 청도군보건소를, 경남 밀양시는 지난 2005년 폐교하여 원도심 내 16년째 방치되어있는 옛 밀양대학교 일부를 새단장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좌), 경남 밀양시(우)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 해수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어촌어항재생과. 2022.02.28.

### 도시 정책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에 신청한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심사(2.10), 현장실사(2.21~2.23)를 거쳐 4개소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대상지 심사과정에서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민간 조직인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의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4개 기초지자체에는 4년 동안 최대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첫해에는 지역자원 발굴, 지역 사회문제 및 주민 서비스 욕구 조사 등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어촌생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살아보기, 창업실험실 등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현장 완성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촌생활권 설정 선정지 대표 사례: 강원도 동해시]

## 서울특별시, 유희주차장 나눔으로 1만7천면 개방

주차계획과. 2022.02.22.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희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5년(’07~’21년)간 총 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이 드는 반면, 유희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 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한다.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②‘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③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가치 있는 나무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제도 운영

산림녹지과. 2022.02.08.

### 환경

부산광역시가 버려질 위기에 놓인 나무를 활용해 관내 녹지공간 확충에 나선다. 부산광역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나무와 개인이 기증하는 나무 등 가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무은행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가 가치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가치 있는 수목자원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가 나무은행을 통해 재활용한 나무는 대왕참나무 등을 비롯해 총 24종, 3천810주로 약 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나무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연중 기증 신청을 받고 있다. 기증받은 나무는 선별 과정을 거쳐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기증 신청은 해당 구·군 녹지부서 및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나무은행 기증수목 식재 사진]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관광진흥과. 2022.02.09.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공정관광’, ‘무장애 관광’ 등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등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무장애 관광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약자에 관한 인식 전환 교육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부 검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해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8일 오후 6시까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대구광역시, 특·광역시 최초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책과. 2022.02.10.

건축  
정책

환경

대구광역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022년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11일자로 공고했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이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의 노후로 석면 비산의 위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했으며,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약 40개소 정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마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작은 면적, 노후건축물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해체·제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 석면해체·처리비 : 석면면적 1㎡당 40,000원 전액 지원

▶ 개량비 : 최소 1,000,000원 지급

석면면적 기준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만약 지원기준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소유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대봉동 명품 웨딩골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민생경제과. 2022.02.28.



대구광역시는 작년 대봉동 웨딩 의류봉제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소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중소벤처부가 지정한 중구 대봉동 ‘웨딩 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는 드레스, 턱시도, 한복 등을 제작하는 의류봉제 소공인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미용, 주얼리, 여행사 등 웨딩 관련 소상공인 200여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웨딩 특화지구이다.

대구광역시는 지금까지 대봉동 웨딩골목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작년에는 총 사업비 23.8 억원을 투입해 ‘웨딩 의류봉제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로서 웨딩 산업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했다.

### 【 웨딩사업 비즈니스센터 개요 】

- ❖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20-9
- ❖ 연면적: 392.49㎡(지상 3층)
- ❖ 조성현황: 1층 홍보관 / 2층 공용장비실 / 3층 컨퍼런스룸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실습을 위한 교육장,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룸, 그 밖에 제품 홍보관 등 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유형별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및 장비활용 교육, 제품 전시 및 홍보 등 업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3D 프린터, 고속 조각기, 레이저커팅기·마킹기, 자동사절 채봉기 등을 구비한 공용장비실, 고성능 카메라 및 셀프스튜디오 등 다양한 최신 장비와 부대시설을 지역 소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시민중심 도시공원 환경개선 본격 추진

공원녹지과. 2022.02.03.



광주광역시는 올해 총 104억 원을 투입, 도시공원을 집중 관리·운영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외부활동 제약 등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공원시설을 도입해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관내 도시공원 135곳(근린공원 119곳, 주제공원 16곳)에 매년 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산책로 정비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억여원이 증가한 60억원을 확보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총 43억원으로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률이 높은 푸른길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 시설개선(9곳 22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등 정비하는 시민참여예산인 도시공원정비(15곳 10억원) ▲수완호수공원 등 공원 내 음약분수 운영(3곳 1억2000만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녹지관리(105곳 10억원)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월 17일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에서 대상지별로 설계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공원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는 푸른길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5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공원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 취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도시공원이용프로그램(8000만원)을 공모를 통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정신 담은 금강보행교 잠재관광지로 우뚝

회계과. 2022.02.15.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월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내달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향상화한 국내 최초 원형·복층 구조의 교량이다.

금강보행교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세종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며, 금강의 남과 북을 이어 주민들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식물 온실 국립세종수목원, 2018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세종호수공원과 더불어 금강을 횡단하는 원형의 금강보행교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금강보행교 사진]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건축디자인과. 2022.02.06.



경기도가 올해 생활 안전 취약지의 야간 보행로를 개선하고,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구리시 수택동 등 5곳에서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지역인 안양시 관양2동 ▲노후 원도심 지역인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제외지역으로 유흥가에 인접하여 생활 안전에 취약한 광명시 광명동 일원 ▲그린벨트 내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화성시 매송초등학교 일원 ▲재개발지역 주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구리시 수택동 일원 등 5곳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 이후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5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범죄에 취약한 야간 보행로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등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개선,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와 공원·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 전라북도, ‘한옥과의 만남’ 주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

주택건축과. 2022.02.21.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전라북도가 한옥 거주를 원해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과 2억 한도 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축할 경우 보조금(최대 5천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용자금(최대 2억원, 연리 2%)을 10~14동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옥 주택으로서, 최소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내에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용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2월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초까지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한옥 사진]

## 전라남도, 30억 들여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시군 공모로 추진

문화자원과. 2022.02.08.



전라남도는 예향 남도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숨은 관광지를 찾아 관광명소(핫플레이스)로 가꾸기 위해 30억 원을 들여 ‘남도특화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도특화경관 조성’은 경관이 있고 호기심을 끌 만한 특징 있는 생활환경 등 남도의 문화가 스며있는 곳에 창의적 콘텐츠를 입혀 ‘블루 투어’를 견인할 새로운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지역 주민전문가 참여형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웰빙을 위한 소소한 여행, 모바일에 의한 여행플랫폼 변화 등 언택트 시대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2월 중 시군 공모에 나서 건축과 디자인, 경관, 마케팅,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1차 서류심사와 발표, 2차 현지 평가를 거쳐 후보지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하는 한편 경관위원 65명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관 무료자문단’을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양 망덕포구와 신안 팔금도 일원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색채 정비 등 이미지 개선사업과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경상남도, 2022년 청년친화도시·청년터 공모, 최종 선정

청년정책추진단. 2022.02.24.



경상남도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김해시와 고성군, 청년터 공모 사업에는 거창군이 각각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공모에는 4개 시군이, 청년터 공모에는 2개 시군이 각각 참여했으며,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면 경상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터 조성사업은 시군의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청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 정비 사업비는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청년터 조성 이후에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마련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에 최종 선정된 3개 시군은 자문단의 사업 컨설팅 및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남도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군당 2년간 13억 원, 청년터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구분	주요 내용
청년친화도시 김해 : 꿈꾸는 청년! 김해에서 길을 찾다	- 김해시는 경상남도 내 시군 중에서 청년 비율이 1위로, 많은 청년 인구 수만큼 엠지(MZ) 세대의 선호도와 필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주도적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제안
청년친화도시 고성 : 청년에 진심인 고성	-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 코로나19 등으로 전체 인구 감소율 대비 청년 인구 감소율이 4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주거·부채·심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줄 전환점을 만들고자 청년친화도시에 도전
청년터 거창 : 청년창고 '아림청춘'	- 거창군은 "거창군 청년들이 모일 곳이 없다"는 거창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인근의 축협 창고를 개축하여 청년 공간을 조성할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생활환경과. 2022.02.10.

건축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9,17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263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408동에 55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 (기타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국토위성센터. 2022.02.22.

국토  
정책

안전

국토지리정보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②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④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b>1 재난상황 모니터링</b>
웹, 언론, 타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발생정보 신속 수집
<b>2 피해지역 긴급 촬영</b>
재난발생 직후, 위성/항공/드론을 통해 재난 발생 지역/상황을 신속히 촬영
<b>3 데이터 가공</b>
재난 유형별 최적의 융복합 데이터셋(기존+신규 공간정보)을 가공
<b>4 신속 배포</b>
기 구축 공간정보 플랫폼 등을 통해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공유, 제공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계획

화재예방총괄과. 2022.02.14.

건축  
정책

안전

소방청은 지난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120개소)등 353개소에 대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 초기대응대 편성·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조치명령 10건, 현지시정 169건을 지적·조치하였으며 안전 관리에 관해 현장 관계자 4,446명을 교육하였다. 점검대상 중 343개소는 지적사항 없이 양호하였다.

올해 상반기(2.14 ~ 4.29)중 지난 점검의 조치명령 대상과 연면적 30만 m<sup>2</sup> 이상인 다중복합시설 등 455개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 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 대상처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소방청장상 5점)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

공간정보서비스과. 2022.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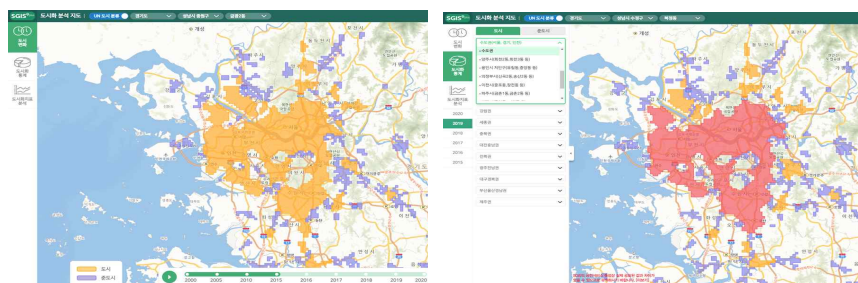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 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는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도와 차트로 구성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SGIS '도시화 분석 지도' 화면 예시]



[SGIS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화면 예시]

##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운영

스마트시티과. 202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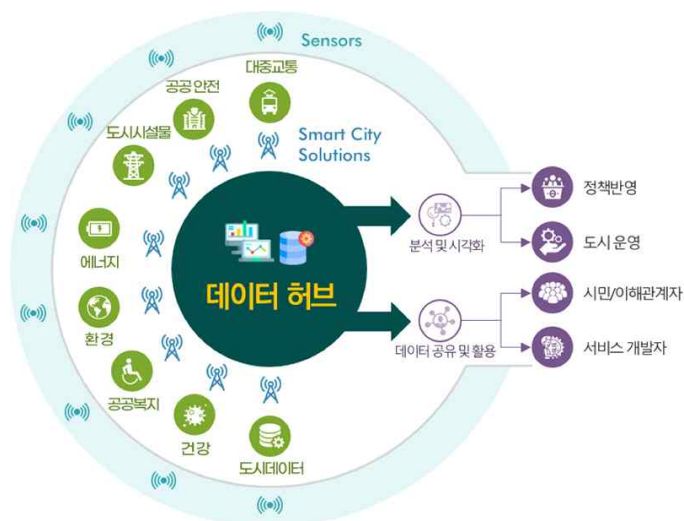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도시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데이터허브센터를 개소해 도시 문제의 선제적 발굴 및 효율적 대응을 중점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24일에 정해용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신광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부원장, 김중근 대구도시공사 전무, 김현덕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지원센터장,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데이터허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데이터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관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교통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주차장,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데이터 및 위치정보
안전	- 재난 및 구조(경사지붕괴/폭염·미세먼지/도시홍수대응(펌프/수문)/도시홍수대응(맨홀/화재)에 대한 데이터 및 위치정보
도시시설물	- 건축물/교량/복개구조물/펌프장/제방/터널/지하차도/수문/센서에 대한 데이터 및 위치정보, 유지보수와 안전 관련 정보
레거시데이터	- 전력 시설물, CCTV 관제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및 위치정보 등



[데이터 허브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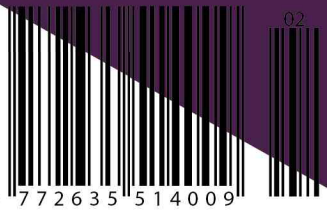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ISSN 2635-5140